

“더내” “못내”...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갈등

광주지역 곳곳 자재가격 인상 등 이유 수천만~수억원대 추가 요구 “분담금 냈는데 또 내라니” 조합원들 반발에 입주일 기약없이 미뤄져 전 조합장 고발사태도...전문가들 “불안정성에 분양 신청 주의해야”

광주 지역주택조합, 가로주택정비 등 도시정비 사업 과정에서 추가분담금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 꿈을 꾸던 지역민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합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 북구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측이 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7600만원을 요구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완공돼 2월 28일 1647세대 입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입주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조합원들은 이미 3000만원을 추가 부담했는데도 또다시 추가분담금을 요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애초 조합원 혜택으로 3억원 후반에 입주가 가능했는데, 추가분담금을 제차 납부하면 5억원에 가까운 돈을 내는 셈이어서 조합원 입장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6일 업무대행사 대표 40대 A씨가 ‘조합과 결탁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등 억측과 의혹이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현 조합장의 해임, 새 집행부 선출 등 안건을 가결할 계획이다. 반면 조합 측은 임원이 교체되면 입주가 지연되고 추가분담금이 늘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북구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지난해 6월 준공 이후 입주까지 이뤄졌으나 추가분담금 문제로 9개월 넘게 조합 해산을 못 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최근 90여명 조합원에게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22억 3000여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했다. 1명당 2000여만원 수준이다.

추가분담금은 불가 상상을 비롯해 시공사·설계자·정비업체를 선정 및 변경 계약하는 과정 등에서

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북구는 최근 전 조합장을 예산을 3억원 넘게 초과해 계약을 맺는 등 부당한 계약을 한 혐의 등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조합장은 지난 2월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들은 오는 31일 기존 집행부 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데 따라 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를 꾸릴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추가분담금 관련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북구의 또다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약 2억원의 추가분담금을 낼 것을 안내해 반발을 샀다.

같은 해 남구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1억 1500만원~1억 6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 조합원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도시정비사업 방식의 특성상 최근 추가분담금 부과는 ‘필수’가 됐다. 대행사나 조합 측이 제시한 초기 분양가를 액면 그대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충분한 자본을 갖고 직접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아니라, 조합원의 돈을 끌어모아 한정된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사 기간이 늘거나 계획이 수정될 때마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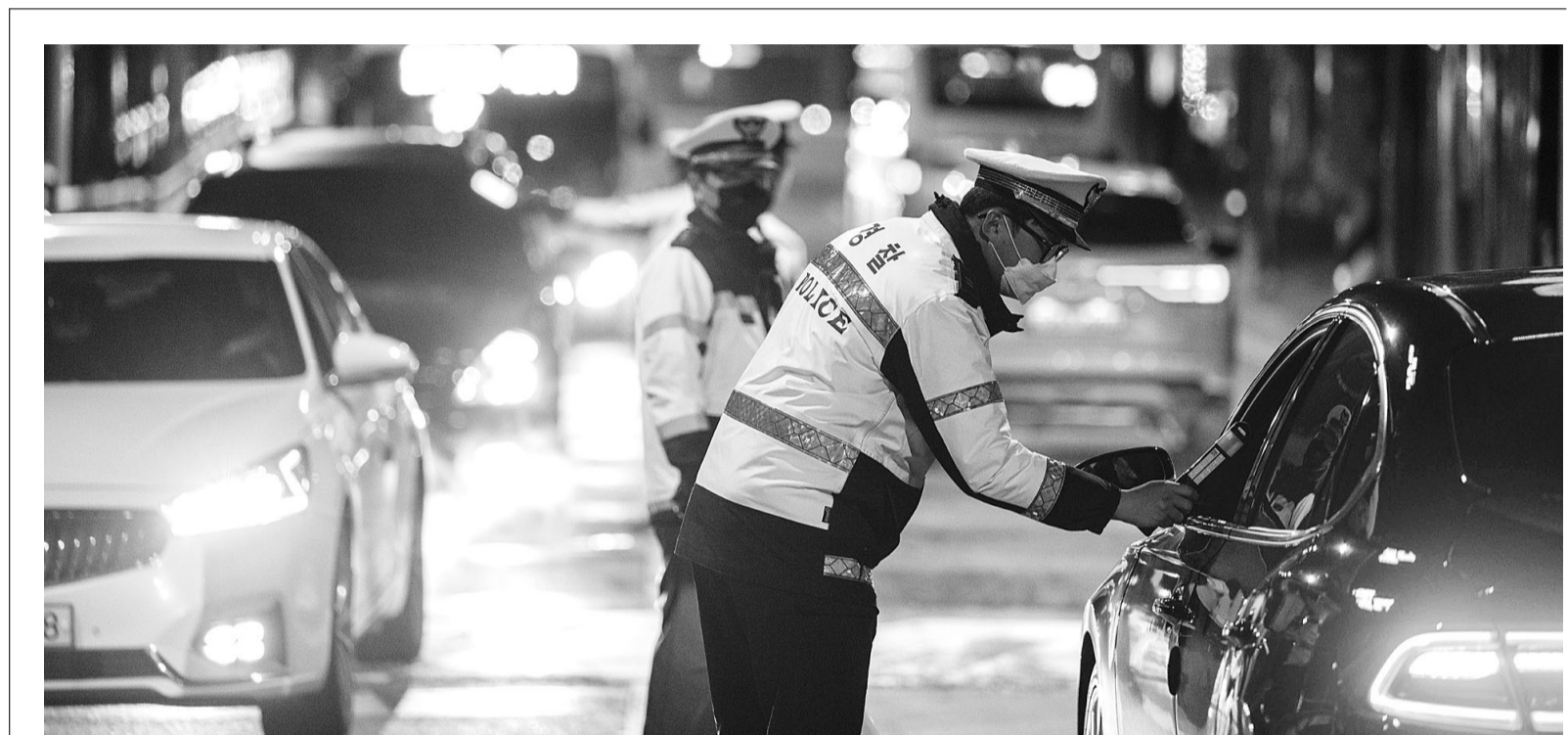
법적·행정적 근거를 갖추고 정비 계획을 짜더라도 지자체 도시계획, 건축계획, 교통 등 소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나면 계획이 바뀌고, 공사가 늦어져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미분양

세대가 속출하는 등 사업성 악화 리스크도 결국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장은 “일반 분양비보다 훨씬 싼 값에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토지확보율과 구체적인 정비 계획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계획 또한 언제든 수정돼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도 지주택 등 사업장에서 단순 위법사항을 검사하는 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 직접 개입이 어렵다면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사업으로 공급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주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총 58곳(동구 3곳, 서구 12곳, 남구 21곳, 북구 10곳, 광산구 12곳)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동구 12곳, 서구 9곳, 남구 16곳, 북구 50곳, 광산구 3곳 등 총 90곳에서 진행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26일 밤 광주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동구 산수동과 북구 두암동을 잇는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근무시간에 수영장 간 경찰 간부 감찰 착수

광주 기강해이 율들어만 4명 조사

광주 경찰이 근무시간에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적발돼 감찰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음주운전 적발 사례들을 포함하면 올해 들어서만 4명의 경찰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경찰은 현 광주동부경찰 소속 A 경감의 복무 위반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경감은 과거 광주북부경찰에 근무할 당시 1년여에 걸쳐 근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해 수 차례 다른 지역 수영장 등

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광주서부경찰 소속 B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 남구 봉선동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달미를 잡혔다. B 경위는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 수준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경위는 지난 26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됐으며, 1월에는 광주북부경찰 소속 경위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법원 “회사 합병 시 형사처벌은 승계 안 돼”

안전 미흡 건설업체 처벌 면해

광주도시설도 2호선 공사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설업체가 처벌을 면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화건설은 826억여원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5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하청업체가 휴막이 배팀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을 방치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022년 11월 한화건설이 모기업인 주식회사 한화에 흡수 합병돼 형사처벌을 승계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법인이 형사 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거나 형사 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상 형사 처벌은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합병 후 회사인 모기업인 주식회사 한화에도 형사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기록 조작해 민방위 훈련 빼준 공무원들 집유에 검찰 불복 항소

검찰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공전자기록위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38)씨와 B(37)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광주시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인 C씨의 민방위 훈련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8년 A씨의 부탁을 받고 지인의 훈련을 제차 빼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행정 시스템 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상자가 훈련을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6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공적인 전자 기록을 조작해 무력화해 죄책이 무겁지만 피의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두루 고려해 감형을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민방위 훈련을 성실히 이수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반해 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을 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온라인 게임 불법 해킹프로그램 판매한 20대 벌금 900만원 선고

온라인 게임에서 장애물을 가려진 상대방의 캐릭터를 보여주거나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등의 악성 프로그램인 일명 ‘핵(hack)’을 판매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16일께 유명 온라인 게임의 비인가 프로그램(해킹 툴)을 1만 8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해 모두 2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2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악성 프로그램은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해 감춰진 상대방 캐릭터를 보여주거나 적에게 쏜 총탄이 무조건 적중되는 등의 효과를 냈다.

A씨는 이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사이트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 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게임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다른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